6 · 3항쟁의 역사적 의미

글 · **박진희** pkamzik@mest.go.kr

한일협정 예비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양측 대표

한일협정의 체결

사복 경찰에 의해 줄줄이 연행되고 있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 가담자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협정 조인식이 있었다. 한국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郎), 한일회담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가 참석했다. 이들은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 2월 1차 한일회담부터 1965년 7차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장장 14년을 끌어온 한일회담에 종지부를 찍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 등을 포함한 한일협정에 서명했다.

한일협정에 대한 평가는 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일협정으로 받게 된 청구권자금이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청산문제를 덮어버렸다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과거사 청산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며 시작된 협정 체결 반대운동이 급기야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한 요인이었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1964년 공보부는 국민의 99.1%가 국교수립에 찬성했다고 했으나, 1964년 12월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 찬성, 28%는 반대, 27%는 미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과 비준 반대운동은 한일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명분과 실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과거사 청산문제와 청구권 문제,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를 연동시켜 정치적으로 타협 · 처리했기 때문에 한일협정은 체결과정과 내용이 모두 문제가 되었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전개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1964년 한일회담의 진행과정과 내용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청구권과 평화선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폭 양보하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평화선 수호와 합리적인 청구권 요구가 화두가 되었다. 1964년 3월 23일 도쿄에서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이 5월에 한일협정을 조인하는 일정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다음날인 3월 24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굴욕타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날의 구호는 다음과 같았다.

'평화선 사수', '일본제국주의 분쇄', '한일 매국 흥정 중단', '동경 체재 한국 외교단과 서울 체류 일본상사 철수', '매판재벌 축출', '민족자본 형성' 등이었다. 이날의 대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지식인, 고등학생, 어민 등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다. 한국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가장 앞장서 비판해온 『사상계』는 '미숙한 소영웅주의' 와 청구권자금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관념의 우상' 을 박멸할 것을 주장하였다. 6월 3일 최고조에 달한 반대운동은 박정희정권은 4 · 19항쟁을 부정한 정권으로, 대일정책은 반민족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날의 시위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시위대 해산작전으로 겨우 무마할 수 있었다. 이때 일부 언론은 학생운동이 다분히 정치적 데모로 변질되어 평화적 한계를 넘어섰다, 한일회담 반대 대신 민생고 책임 운운의 거창한 구국운동으로 구호가 변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태도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결국은 민생문제와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학생운동을 과격한 정치운동으로 호도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반대운동은 정치적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협정체결을 저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964년 반대운동이 한일협정 체결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1965년의 반대운동은 비준저지운동이 목표였다. 2월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가조인이 있고 난 후 가조인 무효와 평화선 철폐 반대시위가 전개되었다. 6월 22일 조인을 앞두고는 단식농성과 가두시위로 조인반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은 체결되었고 양국 국회에서 비준안은 강행 통과되었다. 한국에서는 1965년 8월 14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일본에서도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자민당의 강행으로 11월 12일 중의원, 12월 11일 참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뒤이어 12월 18일 양국 한일협정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한일관계는 '정상화' 되었다.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

한일협정 체결을 둘러싼 찬반논의에서 중요한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 문제였다.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체결 찬성론자들이 내세운 것은 반공안보논리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널리 퍼져있었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으로 해소할 계획이었다. 일본도 과잉생산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시장과 과잉자본의 투자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본의 구상은 일본이 설비투자와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은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제공하는 분업구조였다. 이를 통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한다는 구상이었다. 때문에 기술 이전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런 분업구조는 결국 한국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를 근거 없는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즉, 지나친 피해의식만을 내세워 협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 원조를 유치하는데 관련성이 매우 깊은 고차원적 포석 역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법정에 선 학생들

할을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설명이었다. 또한 일본은 한일 사이의 경제적 분업과 협력이 이루어지면 한국이 더 빨리 근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이에 대응하였다. 결국 한일 양 정부는 청구권 문제에 담겨있던 과거사 문제, 배상과 보상 문제를 '경제협력' 이라는 자본논리로 해소해버렸다.

특히 청구권 중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억 달러의 성격이 문제였다. 한국 정부는 무상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는 배상적 성격의 자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 정부는 배상이 아닌 말 그대로 경제협력일 뿐이라고 못 박고, 이로써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개인의 배상권까지를 모두 포괄해 무상 3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10년에 걸쳐 받되 대일청산계정에서 한국이 빚지고 있는 4,573만 불을 3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분할 상환금을 제하면 1년에 약 1,500만 불 정도의 자금이 제공되며 이것도 생산품, 서비스, 기술 등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한국 경제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오히려 차관 형태의 청구권 자금이 한국에 유입됨으로써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일본 자본에 한국 경제가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또 한 가지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주요 논리는 평화선 철폐와 어업협정의 문제였다. 1952년 1월 18일 선포된 평화선의 목적은 한일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영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자 조속한 한일어업협정 체결이었다. 한국 어민들은 평화선을 '생명선' 으로 여겼고, 이를 대체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사이의 어업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평화선은 과거사 청산과 청구권 문제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청구권 타결을 위해 평화선을

경찰에 연행당하는 시위대 모습

'양보' 해버린 것이다. 평화선 설정의 목적 중 하나인 한일 어업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어업 격차 해소는 청구권 자금 중 9천만 불의 어업협력자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평화선 사수가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의 최대 이슈가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어민들은 평화선 철폐는 '돈이 딱하다고 마누라를 파는 격' 이며, '황소와 트랙터의 대결' 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청구권 자금을 받는 대가로 평화선을 철폐하고 12마일 전관수역 설정과 공동규제 방향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실리가 없다며 비판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본이 제공하는 어업협력자금이 결국에는 평화선 수역 내에서의 조업으로 취득된 이익금 중 남는 돈을 주는 격이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는 공동규제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조업하면 한일 간 어선의 규모, 어업기술력의 차이로 한국 어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민들은 공동규제수역 설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본에서도 일본이 소련, 미국 등과의 어업협정에서는 굴종 관계를 감수한 반면 한국을 상대로 한 어업협상에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일본의 영세 어민들 중에는 평화선이 철폐되면 일본 어업대자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멸종될 우려가 있고, 결국 이익은 대자본과 수산 가공업자들의 몫일 뿐 자신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화선을 넘어 조업할 능력이 없는 영세 어민들로 협정 체결로 한국에서 김과 해산물의 대량 수입, 평화선 수역에서의 다량의 어획물 입하가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일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평화선 철폐를 원했다는 기존 주장과는 다르다. 결국 평화선 철폐에 따른 일차적 피해는 한국과 일본의 영세 어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성격과 의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부를 제외한 전 국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한일회담이 개시된 이래 한일관계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청구권문제, 어업문제와 평화선문제, 재일조선인문제 등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현안이었을 뿐 아니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같은 인식을 무시한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졸속 강행 처리방식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던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적거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현안문제 중 유일하게 일본 국민의 관심을 끈 것은 평화선 문제였다. 평화선으로 인해 자국민이 나포 · 억류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 문제를 뺀다면 한일협정은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본인들은 원자폭탄을 경험한 자신들이 가장 큰 전쟁의 피해자라고 인식했다. 일본이 전쟁을 도발한 침략자이자 가해자였다는 인식은 결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든 측면이 컸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선택의 문제처럼 다루었다. 과거사에 연연하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제2의 이완용' 을 자처하는 우를 범했다. 그런데 그 실리의 기준과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였다. 당시의 한 설문응답에서 한국정부의 조건과 방식으로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소탐대실(小貪大失)' 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끌어내지 못한 반면 평화선을 양보하며 받아낸 대가는 너무나 미미함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체결과 비준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민족자존의식과 반독재, 반독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평가는 현재에 이르러 법적으로 재확인되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한일회담 반대 시위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 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박진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자료사진 경향신문